

문헌정보 (기간중신규입수정보)

1. **コ-ジェネレーション 海外情報(일본열병합발전연구회 '95. 10월 발간: 342면)**
 - 대상국 : 미국, 독일, 네델란드, 이태리, 스페인
 - 내용 : 도입배경, 도입사례, 도입건수 및 용량, 이용형태, 투자비, 지원제도 전력매매제도, 시장동향등.
2. **'96 전기총람(전우문화사:1045면)**
 - 전기기기, 부품, 자재,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명부와 취급품목 개재
 - 전기관계기관, 협회, 단체, 연구소 명부 개재
3. **자가용 전기설비 보수/점검/정비(전우문화사:284면)**
 - 대한전기협회감수
 - 내용 : 보수.점검.정비의 기본, 수전.배전설비의 보수.점검.정비, 전동기.제어기기의 보수.점검.정비,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사고와 대책, 한전배전보수운영지침(발췌)
4. **전기사고 사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(전우문화사:324면)**
 - 월간전기 편집부 역.편(전기사고례160건)
 - 내용 : 감전사고사망사례(54건), 기기파손사고사례(46건), 기타(60건)
5. **전동력 설비의 절전기술(전우문화사:197면)**
 - 월간전기 편집부 역.편, 고려대학교 박귀태 교수감수
 - 내용 : 기업에서의 시스템 개발이나 공장운영에 있어서 효율과 생산성증대,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수록
6. **전기설비 안전관리실무(전우문화사: 211면)**
 - 전기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.규칙 및 점검.측정.시험 등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종합 수록
7. **전기설비 보수기술 편람(전우문화사:186면)**
 - 월간전기 편집부 편저, 대한전기협회 추천
 - 내용 : 전기설비의 보수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와 설계 및 시공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핸드북
8. **'96 우수에너지 절약 사례집(에너지관리공단:260면)**
 - '96 에너지절약축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중 13개 우수사례 수록
9. **'95 집단에너지 사업추진현황 (에너지관리공단:144면)**
 -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보유운영업체의 연료사용현황, 운영실적 및 효과 수록

참고자료1 『競争力 10% 이상 높이기』 方案 ('96.10.9)

財政經濟院, 農林部, 通商産業部, 情報通信部, 環境部, 保健福祉部, 勞働部, 建設交通部, 海洋水産部, 總務處, 科學技術處, 公正去來委

I. 『競争力10% 이상 높이기 운동』의 추진배경

-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.
- 우리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근본원인은 구조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이 약화되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,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힘들 전망
 - 경쟁력 약화로 인해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

10년전에 비해 대폭 절하되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원/100엔	85말 443.7	95말 749.2	95. 10. 7 736.1
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- 임금.금리.물류비등 요소비용이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
 - 임금상승율이 노동생산성을 훨씬 상회
 - 높은金利와 취약한 재무구조로 금융비용부담이 가중
 - 시장금리(95평균,%)

· 제조업부채비율(94,한국95,%)

한국	미국	일본	대만
13.8	6.3	3.0	7.3
286.8	166.5	209.3	87.2

○ 사회전반의 소비분위기 확산으로 씀씀이가 증대

· 위스키 수입(%)

94	95	96.1~8
68.4	60.1	52.9

□ 한편 세계각국은 정부부문 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한 구조적인 경쟁력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

○ 미국은 재정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등을 통해 최근 높은 성장속에 고용안정을 시현

○ 최근들어 독일도 복지축소등 재정개혁을 추진중

○ 뉴질랜드는 정부조직,인사,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편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

○ 아프헨티나는 경제회생의 유일한 방법은 고용조건의 완화라고보고, 임금구조,근로시간,해직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중

○ 선진국기업들도 기업통합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

(예) · 미국의 AT&T사의 경우 96년중 4만명 감원 계획

· 미국의 IBM사는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6.9만명 감원(92~93)

·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218개 부서중 30% 감축계획(96~98)

□ 따라서 우리도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하여는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 시급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

□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출선수범과 기업활력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『9.3대책』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

○ 그 후속조치로서 경쟁력 강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향후 1년 이내에 『경쟁력을 10% 이상 높이는 운동』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

II. 추진방안

<기본방향>

- ◇ 「9.3대책」에서 제시한 경제체질강화 노력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각 경제주체별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
- ◇ 이를 위해 우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출선수범하여 경쟁력향상 분위기를 조성.확산
 - 공공부문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.추진
 - 아울러 민간부문의 경쟁력향상 노력을 뒷받침

1.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이기

(1-1) 정부의 예산집행방식을 개선

□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인 수요 또는 기준만 제시하고,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턴키(Turn-Key)발주방식 적용을 확대

○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중 10% 수준만 턴키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나,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

* 93년 256건중 21건, 94년 423건중 47건, 95년 542건중 66건

○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 입찰방식으로 시행

(현재는 대부분 정부가 실시설계후 민자유치)

○ 턴키대상 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

□ 경상적경비 지출절감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

○ 종이,유류,해외여행경비 등의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추진

- 사무용품비를 부서단위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, 현금집행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은 각 부서운영비로 사용토록 허용

- 10월중 「세출예산 집행지침」을 보완하여 시달

○ 부처별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분을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

- 조직축소 또는 결원의 확대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잉여재원발생시, 해당기관에 잉여재원의 일정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

(1-2) 인력과 조직의 감축 운용

- 사무보조원 등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인력은 4년간 10,000여명 절감
 - 전산화·자동화로 보조인력을 대체하고, 철도·체신 등 현업기관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
-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을 추진
 -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
 - * 파출소 100여개 등 통폐합
- 민간이양이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민간에 이양
 - 병원, 항만시설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민간이양 추진

(1-3)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의 경영을 혁신

- 정부투자기관의 경우,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10% 높이는 운동을 전개
 -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
 - 97년 투자기관예산의 편성기준이 되는 예산편성 지침(10월중 시달예정)에 반영하여 시행
 - 생산성 향상등으로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을 최대한 인하
 - 우선 포철의 미니밀에서 생산하는 핫코일의 내수판매가격을 10월말부터 8% 인하(25.6만원/톤 → 23.6만원/톤)
 -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하고, 「114」유료화등 요금체계도 조정
 - 기관별 생산성 향상결과를 평가하여, 투자기관 상여금 산정시에 반영
 -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분은 해당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
 - 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(한국수출, 서부, 중부, 동남, 서남)을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원을 대폭 축소
 - 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임대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추진
 - * 관리공단 5개를 1개로 통폐합
 - * 열병합발전소는 민간기업 또는 실수요자단체에게 매각
-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경쟁을 촉진
 - 공기업은 민영화 이전이라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경영효율을 증진

-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(원자력제외)은 한전과 민간기업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여 건설

<장기전력수급계획(1995~2010)상 발전소 건설계획(원자력 제외)

(단위: 만kW)

구 분	1995~2006	2007~2010	계
석 탄	1,510(27기)	-	1,510(27기)
LNG복합	1,204(28기)	540(12기)	1,744(40기)
양 수	208(10기)	50(2기)	330(12기)
수력/기타	186(24기)	-	186(24기)
합 계	3,180(89기)	590(14기)	3,770(103기)

- 전력산업에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한전의 전원입지 확보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분담
- 민간기업은 발전소를 건설·소유·운영하되, 생산전력은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
- 공단개발시 정부는 사업규모, 사업지역 및 유치업종 등 제반기준만 제시하고, 한국토지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민간 등 누구든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단개발이 최대한 경쟁체제가 되도록 개선
 -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사실상 과점 개발체제이나, 앞으로는 수자원공사·민간기업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등 제도를 보완
-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도 경쟁을 도입
-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자율성을 확대
 - 이사회 제도를 개편하여 고객, 금융기관, 업계, 학계 참여를 확대
 - * 현행이사 : 주무부처 공무원, 공기업 경영관련 학계, 연구기관, 관련단체 인사등
 -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폐지하고, 행정기관에 의한 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외부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
- 우정업무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인력절감 및 우정적자를 개선
 -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소속기관(지방체신청, 우체국)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지급
 - 년차별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·시행

- 조직.예산.인사.수수료결정.우정재산의 활용 등에 있어 부분적으로 정부조직법,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 인정

2 기업의 경쟁력 향상노력을 뒷받침

(2-1) 임금안정과 산업인력 수급원활화

- 고임금이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임금안정을 유도
 - 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
 - 자동차, 조선등 주요 업종별 노사협의를 권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임금조정이 되도록 유도
 - 임금체계 단순화와 성과급.능력급 임금제도로의 전환 지도
 - 한국노동연구원에 구성되어 있는 「임금제도 개선 연구단」에서 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
 - * 임금제도개선연구단: 한국노동연구원장(단장), 관계공무원 4인, 학계7인, 노총.경총 각 1인으로 구성
 - * 임금구성비(95년): 정액급여(67.8%), 특별급여(23.2%), 초과급여(9.0%)
- 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하여 개선
-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도모
 - 여성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설치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융자하는 제도를 신설
 - * 지원조건: 연리 3~3.5%, 5년상환, 3억원 이내
 - * 시행시기: 96. 10월부터
 - * 고용보험기금 총 규모: (95) 3,542억원
 - 퇴직 고급.중견인력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경총에 설치 (96.7)된 고급인력 정보센타를 단계적으로 확충
 - * 고요조정지원내용
 - 전직훈련지원금 :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을 지불한 기업에 대해 훈련비용 전액 및 임금의 1/2 지원
 - 인력재배치지원금: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의 60%이상 유지한 기업에 대해 재배치 근로자 임금의 1/2지원
 - 휴업수당지원금: 소정 근로일수의 1/15이상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수당액의 1/2지급

- 지역고용촉진지원금: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.증설한 기업에 대해 새로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/2을 조업개 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
- 기능인 우대시책을 통한 일하는 풍토조성
 -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
 - * 현행 기능인 우대시책
 - 최고기능 보유자(명장) 등에 대한 포상 및 명장작품 전시회 개최
 - 국제기능 올림픽입상자에게 훈장수여 및 기능장려금 지급
 -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사업 인허가시 우대
 - * 현행 주요 근로자 지원제도
 - 근로자주택제도, 기숙사건립지원,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, 종업원지주제, 근로자 장학사업,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비 대부등

(2-2) 기업금융비용 10% 경감추진

- 금융기관의 생산성 10% 증대운동을 전개
 - 조직혁신 및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제고
 - 금융감독기관, 국책은행,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
 -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정도에 따른 해외차입 차등허용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인건비 등 경비절감을 유도
 -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
 -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등
 - * 보험자금의 대출대상을 '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기업'에서 '모든개인 및 기업'으로 확대
 - 은행.증권.보험등 금융산업개편 및 구조개선을 추진
 - 증권업무의 자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충등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화 방안추진
 - 리스.카드.할부금융회사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통합
 -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수.합병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퇴출절차를 간소화(「금융

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」 개정)

- 자금증개 활성화 및 금리안정을 유도
 - 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를 위하여 통화운영방식을 개선
 - 적정 유동성 공급 및 통화의 간접관리정책등
 - 연·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을 금지
 - 금리입찰 관행지속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흡수
 - 콜증개전문회사의 자금증개(96. 10말)로 단기자금시장 통합 촉진
 - 한국자금증개 주식회사에 대한 인가 및 영업개시(96. 10말)
- 기업활동등과 관련된 해외자금의 공급을 확대
 - 수출선수금 한도확대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기간 연장
 -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: 수출실적의 15%→20%
 -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을 30일 확대(지원효과 20~30억불)
 - * 현행 : 중소기업 90~180일, 대기업 60~180일
 -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도 허용

〈현행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융자대상〉

생 산	구 매	융자비율
중소기업	중소기업	100%
대 기업	중소기업	100%
중소기업	대 기업	70%

- 국산 자본재를 일정비율이상 구매하는 경우, 대기업에도 상업차관 허용
- * 현재는 중소기업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해서만 자유화(96. 10월부터)
-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
 - 국제수지·통화·환율등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하여 BBC자금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

〈BBC자금 지원현황(억불)〉

	94	95	96
· 한도	10.0	12.0	18.0
· 집행	6.0	11.8	-

-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97년 출연예산증액분(1,000억원)을 유망 중소기업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적극 활용

(2-3)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완화

- 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% 인하
 - 공장건설시까지의 각종경비를 대폭 경감
 -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면제
- (수도권 지역은 제외)

	부담현황	개 선
· 농지전용부담금	공시지가의 50%	→ 면제
· 산지전용부담금	공시지가의 50%	
· 개발부담금 및 공유수면 개발부담금	개발이익의 100%	
· 대체농지조성비	전: 2,160원/㎡ 답: 3,600원/㎡	→ 면제
· 대체조립비	696원/㎡	
· 대체조지비	503원/㎡	
· 공유수면점용료	인근지가의 10%	

- 공단관리비(현행: 분양가의 2%) 징수를 폐지
- * 산업단지 관리비(분양가의 2%)폐지
- * 대금 완납전이라도 무보증 사용허용
- 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
-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는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(현재50%→100%)
- 공단의 폐수처리장 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
- *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:
 - 시·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70%, 광역시에 대해서는 융자 50% (연리 5%, 5년 거치 10년 상환)
 - 도로·녹지의 비율을 조정하여 공장용지면적을 확대
- * 공단내의 조성되는 도로, 녹지, 공원, 주차장, 운동장, 상·하수도, 유원지등 공공시설확보를 하향조정
- * 현행 도로·녹지의무확보 비율

단 지 면 적	도 로	녹 지
1㎢ 미만	8% 이상	5~7.5%
1㎢이상~3㎢미만	10% 이상	7.5~10%
3㎢ 이상	10% 이상	10~13%

- 장기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대폭 가격인하하여 분양촉진
 - 대분(122만평) . 북평(32만평)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5년 무이자 할부

판매 실시

- 기본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면제

- 92.5월 이후 분양실적이 없는 김천 구성지방 산업단지(16만평)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분양가를 30%인하

□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

-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
 -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, 컴퓨터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증설 범위를 확대 (현행) 기존공장면적의 「25%이내」에서 증설 가능→「50%이내」로 확대
 - * 첨단업종: 컴퓨터, 전자변성기, 반도체, 축전기, 유선통신, 무선통신, 영상음향기기, 전자직접회로, 사진 및 광학기기, 자동차
 -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
 - * 현재는 수도권내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동일한 건물을 이용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만이 허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신축, 개축, 증축 등을 통한 업종전환이 가능
-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
 - * 도시형업종: 첨단업종,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,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(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도시형 업종(필프제조업, 유탄유제조업등)이 아닌업종)
- 현재 건축면적 200㎡로 제한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내에 공장입주 허용규모를 상향조정
- 공장설립 관련규제를 완화
 - 공장건축면적 500㎡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제도를 폐지
 - * 공장건축면적을 현행 200㎡(약60평)에서 500㎡로 상향조정할 경우 공장등록절차가 간소화되고 수도권내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.
 - 공업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
 - 업종변경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 없도록 함
- 장래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 공장면적을 완화
 - * 기업은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4년이내에 「공장기준면적을 만큼의 공장을 설립해야

하나, 동 면적률을 하향조정시에는 경기침체시에도 공장을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기업의 부담을 더는등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.

$$\cdot \text{공장기준면적률} = \frac{\text{공장건축면적}}{\text{공장용지면적}} \times 100$$

□ 국유지를 공장입지로 활용토록 지원

-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허용하여 산업용지로의 활용도를 제고
 - * 현행 국유재산법(제24조)에 의하면 임대국유지상에는 건물 등 영구 시설물의 축조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음
 - 일반 국유지 임대의 경우보다 저가로 임대
 - * 현행 국유지 임대료 : 당해 재산가액의 5% 이상

(2-4)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

□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촉진
 - * 현행은 「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해 면허제로 되어 있으나,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안을 별도로 규정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금년중 제정
- 화물운수업종을 현재 6개 업종(노선, 전국, 특수, 용달, 일반구역, 컨테이너 일반)에서 3개업종(개별, 용달, 종합)으로 단순화하고, 운임신고제도 폐지

□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촉진

- 종합물류정보망」을 금년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, 98년부터 상용화하고, 앞으로 통관, 금융망과도 연계
 - 현재 34%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의 공차율을 점차 축소
 - * 공차율: 화물수송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빈차로 돌아오는 비율
 - * 종합물류정보망은 96년 1월부터 한국통신과 KLnet에서 구축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「전자문서 교환시스템」과 「차량 및 화물에 대한 Data base」, 「화물운송시스템」등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

- 수송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해 수송용 표준 팔레트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표준화된 물류시설·장비에 대한 「물류표준마크제」를 도입
- 물류시설을 확충
 -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(복합화물터미널)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완공
 - 수도권(의왕시 부곡), 부산권(양산), 중부권(청원,연기), 호남권(장성), 영남권(김천)
 - 대도시 주변 광역전철망도 철도청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경쟁체제를 구축
 -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을 제정하여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
-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조건하에 제한적으로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
- SOC 사업에 대한 民資誘致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성 보장 방안등 적극적인 유인대책을 10월말 까지 마련

(2-5)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의 추진

-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
-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·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
- 의무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최소한으로 운용
 - * 현재 24개 법률에 의거 27종의 법정의무고용제도 운영
 - 사회정책적인 목적(장애인, 국가유공자 고용)이나 안전과 관련없는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
- 행정처분시 법적근거없이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구하는 행정행위를 지양
-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

(2-6) 기업의 경쟁촉진 및 부담완화

-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
 - 단체수의계약품목(289개)을 중소기업간 경쟁품

- 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(97년: 10%)
- 97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시(96년12월경)대상품목을 고시한후 97년부터 적용
- * 단체수의 계약 :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

-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, 배타적 유통관행도 개선추진
 - 이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
 - *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형성·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, 필요시 경쟁도입 등 독과점 구조개선 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
-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의 무세화 추진
 - * 비경쟁 기초원자재로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: 망간광, 동광, 아연광등 원광석, 원모, 펄프, 고철등
 - * 96.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실행관세가 무세인 품목 : 유연탄, 원목, 철광석, 원면, 천연고무, 선철(세목기준 39개)

(2-7)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

-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의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
 - 물류와 농수산물의 정보화로 유통비용을 절감
 - 창업관련 정보의 DB구축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
 -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·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제품홍보로 마케팅비용 절감
 - *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시범사업 지원(96년) 및 정부예산지원을 통한 검색시스템 개발(97년)
-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
 - 정보통신분야 전략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력양성체제를 강화
 - 기업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전파사용료 평균 10%이하 추진
 - * 연간 부담감액 : 200억원 수준

-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강화
 - 고가 S/W개발장비, 기술정보 제공 등을 위한 S/W지원센터 설립확대 (96년: 서울, 97년: 지방 4개소)
 - 게임산업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S/W 기술개발관련 정보화촉진기금 지원확대(97년: 1,500억원)
 - 영세업체의 보증사업 등을 위한 S/W공제사업 추진(97년: 50억원)

(2-8)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를 지원

-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각종규제를 완화
 -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지분 소유제한 폐지
 - * 현행 10대 대기업은 20% 이내에서만 창업투자회사 지분 소유가능 (소유분산 우량회사는 예외인정)
 -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
 - * 현행 한도: 주식인수규모의 200%이내
 - 지방 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자의무비율 폐지등
 - * 현행 의무비율: 투자액의 50% 이상을 지방 창업기업에 투자
-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
 -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 실시 및 확대
 -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담보대출을 실시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성화유도
 -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무상양여 및 연구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을 촉진
 - 1~2년내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무상양여
 - 창업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휴직(3년)을 허용하고, 시설.기술.정보 지원 및 자금 알선
 - 해외초빙 과학기술자(97년 130명)의 중소기업 파견확대
 - 고부가가치 성장선도사업인 신의약품.생명공학. 첨단의료기기등 보건의료과학기술분야 집중 개발지원

3. 기업의 경영혁신유도

-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한계기업을 과감히

정리하고 전문화를 유도

-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비효율적 경영을 자제
- 대기업이 원가절감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는 방지
- 경기후퇴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
 - 기업의 차입경영행태의 지양
-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확보
 - 금년 8월부터 기업공시제를 강화한데 이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외부감사의 자율성.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등 개정 추진
- 국내의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으로 쉽게 공장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, 기술개발.고유브랜드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노력을 강화
- 노사가 한배를 탭다는 각오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

4. 소비의 건전화 추진

- 최근 과소비, 소비의 고급화 및 불합리한 소비행태의 만연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 필요
-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생활개혁운동을 전개
 - 음식점의 과도한 음식제공을 억제하고 「좋은 식단체」를 확산
 - 외식풍조를 자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
- 유류, 전기 등의 소비절약유도를 위해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
 - * 국제가격보다 낮은 휘발유, 경유, 등유, LNG, 전기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
- 건전 가정의례모형을 개발.보급하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검소한 가정의례를 정착

Ⅲ. 추진체계

-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,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인사로 「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」(경제동향, 점검회의를 개편)를 구성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
-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두고, 각 부처에는 개별 과제로 1급을 반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. 운영